

“우린 한국인 아닌가요” 소비쿠폰 제외된 고려인 눈물

결혼이민·영주권·난민 등은 지금 정부 “내국인 기준…형평성 고려” “같은 한민족인데” 아쉬움 토로 “공동체로 보는 정책 전환 필요”

“세금도 내고 함께 살아가는데 ‘전 국민’ 정책에는 우리가 빠졌더라고요. 많이 속상하죠.”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한민족인데도 정부 정책에서 종종 소외되는 고려인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의 우려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도 반복됐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을 포함하면서도,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 외국인 등은 제외했다. 광주 고려인 동포 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광산구 월곡동에 조성된 고려인마을에는 약 7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40여 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재외동포 비자나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임시 체류자다. 최근 전쟁을 피해 급하게 입국한 우크라이나 피란민도 적지 않다.

신조야 대표는 “한 집 건너 한 명은 전쟁 때문에 모든 걸 두고 들어왔다. 그래도 선

조의 고향 땅이니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이번 ‘전 국민 소비쿠폰’에서 빠진 걸 보고 아쉬웠다. 이름이 다를 뿐 우리도 이 땅의 일원이다”고 말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상 내국인으로, 소득·지역에 따라 15만~52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예산 범위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정했다. 외국인까지 포함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고 사회적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인마을 주민 대부분은 제조·건설·농장 등에서 노동하며 원전장수 등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언어·문화 장벽 탓에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전쟁 트라우마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정서적 고립에 지쳐 다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이들도 적지 않다.

고려인마을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천영 목사는 “차등 지급되는 25만~50만원이 이곳 주민들에겐 매우 큰 돈”이라며 “같이 살아가는 동포들이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늘 정책에서 제외되고는 한다. 이번 역시 뒤로 밀린 모습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한 고려인마을 동행위원은 “러·우 전쟁을 피해 광주에 온 약 900명의 고려인이 조국의 정을 밟고 정착을 결심했지만, 생계와 제도 소외로 상처받고 있다”며 “정부가 홍범도 장군을 기리며 고려인의 긍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김치 나눔

정영희 두성재단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 임경자(명현관 해남군수 부인)씨, 해남땅 끝와이즈멘, 해남목련로타리클럽, 김영동 해남종합사회복지관장과 직원 등 50여명이 9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여름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다. ▶관련기사12면 김양배 기자

를 말했지만 현실에선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비자 유형별 차등 지원이나 지자체 조례를 통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려인을 ‘한민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책 기준도 국적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술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는 “피란 고려인은 한국과 초

국적 관계를 맺은 동포로 단순한 외국 국적 난민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많은 피란 고려인들이 자녀나 형제자매 등 가족과 재결합해 한국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가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채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박사는 “현행 재외동포법은 해외 거주 동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고

려인·조선족 등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는 추경 일정 등으로 정책 설계가 어려웠을 수 있지만, 향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조례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 같은 배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국적만으로 나누는 것은 또다른 공동체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도로개방 12월22일까지 완료

민원 신속 해결 전담반 구성
차도 덧씌우기·도색작업 실시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해결에 착수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9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 차담회를 열고 “30일 집중 시민 불편 해소 기간 운영해 민원사항에 대해 빠르게 조치하고 12월22일까지 작업구를 제외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를 개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토목

공사 공정률이 92% 수준(지난달 30일 기준)이며 공사구간 도로는 42%를 개방했다. 도로 개방 완료시점은 당초 올해 6월이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양반 물량이 추가로 발견돼 12월로 6개월 연기된 상황이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3가지로 유형화하고 이에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해 관련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공사구간 복공판과 인접차로 단차(통행차로 기울임), 울통불퉁한 포장도로로 인해 운전자의 주행 불편·차량 손상,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차도 덧씌우기를 실시한다. 잦은 차로 변경을 실시하며 지워졌던 노면표지가 다시 나타나는 차선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 구간을 중심으로 차선, 유도선 도색작업을 시

행할 예정이다.

또 정거장 주변공사시 보도구간 점유로 보행공간 협소, 안전시설물 설치 불량에 따라 보행로, 횡단보도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30일 집중 시민불편 해소 기간을 운영해 매주 1회 시민불편 민원현장을 방문, 신속대응 해결대책을 점검하고 공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중흥그룹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